

콜롬비아가 직면한 도전과 한국의 역할

추종연

1. 콜롬비아의 부상

2013년 3/4분기 경제성장률 5%, 지난 해 평균실업률 9.6%, 인플레이션 2%, 외국인직접투자 160억불 이상, 수출 600억불, 최근 41개월 간 250만개 일자리 창출. 이는 금년 2월초 산토스 대통령이 외교단 신년하례 행사에서 밝힌 최근 콜롬비아 주요 경제 통계이다. 2013년 공식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변경의 여지도 있고,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산토스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킨 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콜롬비아가 지난 3~4년 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콜롬비아가 실패 국가(failed state)까지는 아니더라도, 산토스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수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 콜롬비아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향상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가 쇄도하는 매력적인 국가로 부상하였다. 콜롬비아는 현재 OECD 가입과 FTA 등을 통한 개방 그리고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금 보고타 국제공항은 콜롬비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으며, 특히 보고타 시내에 중국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신흥 유망경제국들을 일

권는 시베츠(CIVETS: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에 콜롬비아가 포함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내전종식 및 평화 정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첫째로, 50년 이상 콜롬비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내전을 종식시키는 문제와 내전 종식 이후의(post-conflict) 평화정착 문제다. 정부군의 공세와 일반 국민들의 지지기반 상실로 좌익무장계열라 세력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또 지금 쿠바 아바나에서 콜롬비아 정부와 좌익무장혁명군(FARC) 간에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라 내전 종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콜롬비아 언론도 내전 종식 이후의 평화정착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도 내전종식 및 평화정착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2011년 ‘폭력희생자 보호 및 토지반환법’을 제정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스웨덴, 네델란드, EU, 미국 등 선진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NGO들도 400만 강제이주자의 복귀 지원, 인권향상, 복지시설 제공 등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콜롬비아 평화정착 지원 차원에서 KOICA를 통해 세사르주(州)에서 강제이주자, 원주민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생산력 증대 및 유통망 개선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금년에는 UNHCR과 공동으로 강제이주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25전쟁 직후 좌우익 갈등을 겪었고 또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콜롬비아 정부는 국민재통합청(ACR)을 설립하여 무장해제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편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나이에 게릴라들에게

끌려가 10년 이상을 정글과 산속에서 지낸 터라 사회적응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25,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 확대

두 번째는 사회적 유동성 문제로, 이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부계층이 대부분의 정치, 경제 및 사법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고 또 그 권력을 세습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다. 몇 개의 유력 가문이 협력하여 사업도 하고, 자녀들을 고급 사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며 이들 간 혼인관계를 맺는 등 이들만의 배타적인 클럽을 만든다. 유색인종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빈곤,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빈곤은 교육기회와 고소득 직업 진출 기회의 박탈로 이어져 가난을 세습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중영합주의(populism)가 싹트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빈민가 청년이 고급차량에 줄을 긋고 돌을 던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빈곤이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부유층의 재산을 흠치는데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중남미에서 사회적 유동성 문제는 가장 위험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들은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안으로 교육개선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룬 한국을 경이의 눈으로 그리고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우리 교육부의 지원 하에 매년 20여명의 콜롬비아 초등



인천시교육청에서 주최한 콜롬비아 교사 대상 'IT교육정보화 연수'
(이미지 출처: <http://www.edunews.co.kr/>)

교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IT교육 견학 기회를 주고 있다. 방한 교사들은 보통 수십대 일이 넘는 경쟁을 거쳐 선발되기 때문에 콜롬비아 최고의 엘리트 교사들이다. 이들은 한국을 모델로 콜롬비아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교육방송(EBS) 시스템 및 운영경험을 콜롬비아에 전수중이다. 원격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교육방송만한 게 없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통해 콜롬비아 지방혁신센터 설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개선은 복잡적이고 만성적인 중남미 사회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임에 틀림없다.

4. 공공행정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세 번째로 공공행정의 제도화 문제다. 콜롬비아의 4%내외의 안정적 경제성장 및 치안호전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매년

150억불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콜롬비아 정부도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며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콜롬비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모호한 법제도, 자의적인 규정 변경, 느린 통관시스템, 정확한 입찰정보 부족, 예상치 못한 사업의 연기 또는 취소,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으로 곤란을 겪는다.

그리고 최근 많이 척결되고는 있지만 투명성 부족에 따른 오래된 부정부패 관행이 아직 남아있다. 공직감찰원(Procuraduría General), 검찰청(Fiscalía General),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등 주요 권력기관 간의 갈등도 종종 야기된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바뀌면 국장급 이상 자리도 대부분 바뀐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많은 일자리들은 공개경쟁이 아니라 알음알음 소개로 채워진다. 최근까지 광산업자들의 63%가 정부의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해왔다.

콜롬비아에서 이러한 제도화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 우리나라는 IT선진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관세청은 조만간 Uni-Pass라는 전자통관시스템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예정이다. 기존의 무이스카(Muisca) 통관시스템으로는 FTA 확대에 따른 수출입물량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콜롬비아 정부가 기존 시스템 교체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나라장터’ 조달시스템, 출입국 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민등록 시스템 등 이 나라에 접목 가능한 전자정부 분야가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사례는 이미 세계적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 따라서 콜롬비아에서도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중소기업역량 강화, 과학기술단지운영 역량강화, 하수처리 환경마스터플랜 구축,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마스터플랜, 콜롬비아 수출진흥청(Proexport)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바크림(Bacrim) 신흥마약범죄조직
(이미지 출처: <http://www.arcoiris.com.co/>)

5. 치안 안정화

네 번째는 치안문제다.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인 50년 내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치안문제는 최근 10년을 거치면서 그 성격이 변했다. 과거에는 치안문제가 국가안보문제였다. 콜롬비아 정부로서는 국가전복 능력을 지닌 좌익게릴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하는 게 급선무였고, 국민들의 치안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좌익 게릴라 세력이 현저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치안이 콜롬비아 국민들의 최대 관심 대상이다. 콜롬비아에서는 1년에 1백만 개 이상의 핸드폰이 도난당하고 있으며, 보고타 시에서만 1년에 2,800개의 맨홀뚜껑이 도난당한다. 택시를 타게 되더라도 가급적 콜택시를 부르라고 권고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바크림(Bacrim)이라는 신흥마약범죄조직이다. 무장 해제된 우익민병대(AUC) 요원들이 이들 조직에 편입되면서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이들 간의 암투와 마약거래를 둘러싼 폭력발생으로 시민들

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안티오키아 주(州) 우라바 지역에 근거지를 둔 우라베뇨스(Urabeños) 조직은 위협만으로 그 지역의 공공교통망을 완전히 마비시킨 적이 있다. 쿤디나마르카 주(州)의 에메랄드 생산과 유통에도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유층들과 기업들은 민간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강구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러한 치안문제에 직면하여 16만 명의 강한 경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게릴라전(戰)도 감안하여 정규군 편제와 군에 상응하는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 양국 간 치안협력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에는 검찰협력 양해각서와 경찰협력 양해각서 교섭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또한 콜롬비아 사범 분야 관리들의 방한연수사업을 실시하여 이들의 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SOS 국민안심서비스와 같은 선진 치안시스템 협력도 가능하다고 보며, 민간차원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보안장비 또는 보안서비스 분야 진출도 유망하다.

6. 인프라 구축

다섯 번째로 인프라 문제다. 콜롬비아는 국토의 1/3씩이 각각 산악지역과 열대 정글지역이고 또 대도시가 주로 산악지역에 발달하여 인프라 구축에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50년 간 국가의 부를 내전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없었다. 30년 이상 철도시설 관리 미흡으로 물류가 주로 트럭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전이 종식국면에 접어들고 경제가 호전되면서 전 국토에서 도로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금년 상반기 중에만 55억불 교통인프라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다. 공항 및 항만건설, 송유관 건설, 정유공장 현대화, LNG 터미널 건설, 철도 신설 및 현대화, 하수처리장 건설, 막달레나 강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영세민을 위한

대규모 주택 건설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역시 예산조달이 관건이다. 콜롬비아는 매년 원유 및 석탄 수출만으로 300억불 이상을 벌어들이며 광산개발 로열티만으로도 연간 50억불을 받는다. 콜롬비아 해외동포들의 송금액도 연간 40억불이나 된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유입되는 마약판매대금도 100억불로 추산된다. 게다가 외국인투자도 증가 추세다. 이러한 재원이 모두 인프라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프라 확대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콜롬비아정부는 민관협력사업(PPP)법을 제정하여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콜롬비아 환경부, 주택도시개발부 및 지방정부들과 협력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2년 간 수교 이래 처음으로 공공입찰을 통해 각각 3억불이 넘는 3개의 공사를 따냈다. 지금 콜롬비아에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유수의 한국건설기업이 모두 진출해 있다. 공기단축, 기술전수, 다양한 공사경험의 장점을 지닌 우리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은 북미전의 모습을 보여 온 콜롬비아 건설문화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능한 좋은 현지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작은 공사부터 참여하여 이 나라 시장을 익힌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고타 지하철 건설, 중소도시 교통요금징수 시스템 구축, 천연가스 또는 전기버스 도입,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등 도시인프라 및 환경인프라 사업이 유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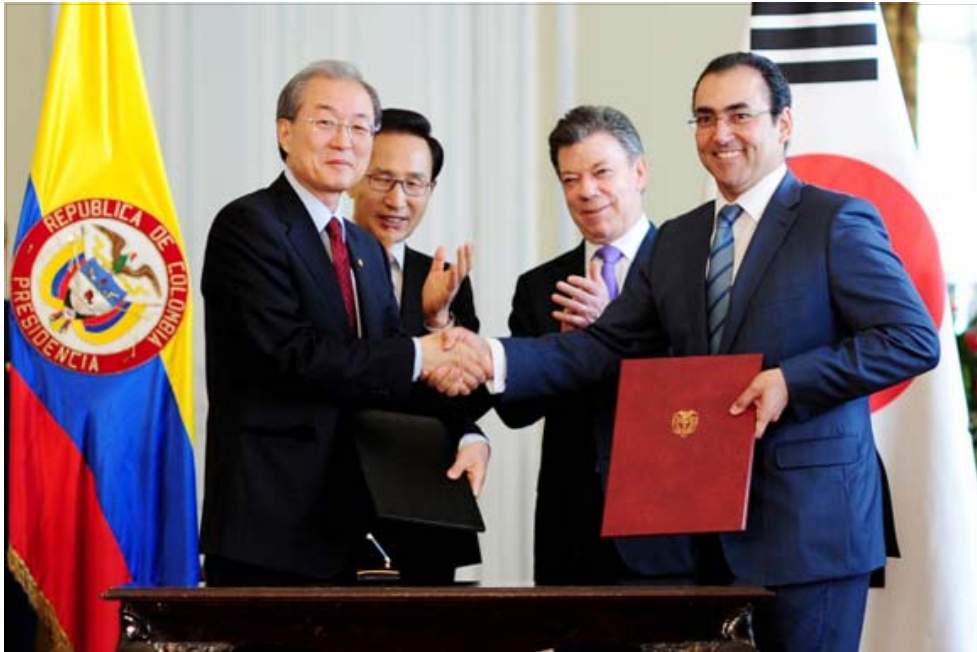
7. 원자재 의존 경제구조 개선

여섯 번째로 콜롬비아는 원자재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문제와 아울러 탈산업화 문제

도 갖고 있다.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석탄, 금, 커피, 니켈, 꽃, 바나나 등이며, 수입품의 대부분은 공산품들이다. 외국인 투자의 60~70%도 에너지 광물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근년 중국 특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에 구세주 역할을 하였으며, 조만간 인도가 원자재 수입에 가세할 예정이라 자원보유국인 콜롬비아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내경제가 지나치게 원자재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업화 또는 공업화가 취약하다. 일부에서는 ‘자원의 저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제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산 공산품들이 밀려들어오게 되자 자동차조립,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섬유 등 국내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기존의 산업이 최근 일련의 FTA 체결로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자국경제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해 하반기 이와 같은 산업계의 비판에 직면하여 추가적인 FTA교섭을 일단 중단하고 산업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자재 중심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전략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콜롬비아 국세청(DIAN)은 지난 해 9개의 특별관세구역(Zona Franca)을 허가하였다. 현재 콜롬비아 내에서 총 101개의 특별관세구역이 운영 중이거나 설립중이다.

금년 중에 한·콜롬비아 FTA가 잠정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는 FTA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또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대 콜롬비아 투자가 1억6천만 불을 기록 2010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콜롬비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1%수준이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산업협력도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의 세계2위 생명다양성 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및 화장품 생산과 더불어 자동차부품 생산, 콜롬비아 식품가공 및 수입, 중장비 제작, 보안기기 생산, 자동차 정비, LED 조명 분야에서 우리기업 진출이 유망하다. 아울러 양국 간 건강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박수치는 가운데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FTA 타결 선언문 서명식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장관이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공공누리)

지속가능한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콜롬비아 상품 수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산 꽃, 커피, 감자, 열대과일(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주스 농축액 수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8.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역할

콜롬비아는 우리에게 마약 주산지, 내전 중심지, 치안불안 등 위험한 국가로 알려져 있어 수년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지금도 여사한 문제와 과제를 여전히 갖고 있으나 한-콜롬비아 관계는 최근 3년간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196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2012년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하였고, 우리 외교

장관의 최초 공식방문도 이루어 졌다. 지난 해 공공분야에서만 86개 우리 대표단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다. 양국관계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로 격상되었으며 지난 해 2월 한·콜롬비아 FTA도 체결되었다. 우리기업의 콜롬비아 진출도 2010년 14개에서 지금 36개로 늘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꼽는다면, 첫째는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으로 형성된 양국 국민 간 심리적 우호관계, 두 번째로는 콜롬비아의 치안 호전 및 안정적 경제성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롬비아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전략적 위치를 들 수 있다. 콜롬비아는 5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을 보유한 중남미 중견국으로, 안데안 지역과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이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60여 년 전 자기들이 도와주었던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우리로부터 뭔가를 배우려하고 있다.

지금 콜롬비아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들이 원하는 지원보다 그들이 원하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방적인 지원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콜롬비아의 평화과정을 지지하고 공감하며, 내전 후 평화정착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양국관계를 위한 의미 있는 장기투자가 될 것이다.

추종연 - 주 콜롬비아 대사